

尹 “폭우 피해 정부 대신해 죄송…최악 염두해 총력 대응”

자택서 중대본 직행…호우 피해 상황 점검·침수 대책회의 대응체계 재검토 지시…“과거 대응 체계론 피해 못 막아”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중부권 집중 호우로 인한 사망자 발생 등 피해에 대해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사소한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택에서 광화문 정부청사 중앙재해대책본부로 곧바로 출근해 집중 호우 대처상황을 점검하고 하천 홍수 및 도심침수대책회의를 주재하는 등 재난 상황 관리에 총력을 기울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이틀간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 복구와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 지원을 당부했다. 또 다른 지역에도 발생할 수 있는 호우 피해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번 사태가 자연재해이

기는 하나 인재 발생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응체계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이상 이런 기상 이변은 이번이라 할 수 없다. 언제든 최대,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중부지방) 폭우는 기상 이변이나 과거 사례에 비해 대응하면 안된다는 걸 보여준다. 예상보다 더 최악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라며 “내각은 지자체와 협력해 복구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과 예산을 신속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또 수도권 외 지역 등 호우 추가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도권이 물난리를 겪었으니 어제 상황에 비해 미리 대처하고 준

비해야 복구시설 등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전북, 경상도 등도 기상청 자료를 긴밀히 공유해 집중호우 예상지역을 타겟팅해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중교통 운행 상황, 도로 통제 현황, 댐 수위, 산사태 위험 지역 등을 각 유관 부처들을 통해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하천 홍수 및 도심침수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전날 장애인가족이 폭우로 사망한 신림4동 현장을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즉각적 경고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에 추진했다 박원순 시장 당시 폐기됐던 지하터널에 대한 재논의도 꺼냈다.

윤 대통령은 “저지대에서 침수가 일어나면 지하 주택에 사는 분들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며 “그래서 국가 하천과 수계 관리 시스템이 있기는 하나 이걸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물길 수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물레이션을 해 즉각 경고체계를 운영하는게 필요



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국가 하천, 지방 하천, 본류와 지류를 아우르는 종합적 물길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오세훈 시장이 과거 준비했다 시의 행정권이 바뀌어 추진 못했던 침수조, 배수조와 물을 잡아주는 지하터널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논의해 재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승호기자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의원 vs 평의원’ 경선

정치개혁연대 측, 최희용 후보로 단일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선거가 복수 출마로 결국 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는 10일 “지난 6일 발기인 대회에 이어 9일 밤까지 내부 논의를 거쳐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후보로 최희용(47) 전 참여자치21 대표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치개혁연대 측은 출마의사를 밝힌 최 전 대표와 민주당 복구감지역위 노동위원장을 대



상으로 단일화 논의를 거쳐 최 전 대표를 단일 후보로 내세우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시당위원장 선거는 광주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추대한 이병훈 의원(동남구)과 평의원 신분인 최 전 대표와의 양자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시·도당위원장은 그동안 현역 국회의원 간의 경선이나 합의 추대 형식으로 선출돼 왔으나, 최근 ‘당원이 주도하는 민주정치’를

표방한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가 출범하고 첫 행보로 시당위원장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경선이 현실화됐다.

최 전 대표는 한길세무회계사무소 대표로, 민주당 부대변인,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열린캠프 국민소통본부 균형발전상황실장 등을 역임했다.

최 전 대표는 “당의 목표, 시민과 당원들의 목표는 오직 ‘정권교체’로 동일하지만, 지금까지 폐쇄적이고 시민과 당원을 대상화시키는 정당운영 방식으로는 국민의 식어버린 열정을 되돌릴 수 없다”며 “민주화세력의 중심이 돼 연대와 연합을 이끌어내고 정권교체를 해나가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8~9일 시당위원장 후보 등록 공고에 이어 11일 후보자 접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후보자는 기탁금 1500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후보가 2명 이상이 되면 경선 기탁금(6000만원 안팎)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시당위원장은 권리당원 50%, 전국 대의원 50%를 대상으로 여론조사와 현장투표 등을 통해 선출될 예정이다.

최이슬기자

이준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국회의 사당이 위치한 여의도를 관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서병수 전국국 의장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 인선까지 마치고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이 대표는 직에서 자동 해임된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주호영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고 전국위에서 임명안이 가결되기 직전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한다. 신당 창당은 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정치적인 문제를 사법 절차로 해결하는 것은 ‘하지하(下下)’의 방법”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오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표 역시 당을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당에 걱정이 되지 않는 선택을 할 거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 안에 이 대표에게 연락해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